

오피니언

다산포럼

강명관



보름 전 일이다. 일흔 좀 뛰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자기 조상 문집이라며 '오유재집(烏有齋集)'이란 필사본 문집 한 책을 가져와 저자를 알려 달라고 했다. 자기 조상 문집이라면서 저자를 모른다는 것이 적잖이 해괴했지만, 요즘 세태로 보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이리저리 살펴보니, 저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노인에게 사정을 그대로 말했더니, 적잖이 실망하면서 돌아서는 것이었다.

세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요컨대 아침은 출세에 꼭 필요한 조건이라 하겠다. 아침을 잘 하는 사람은 총명하고 약삭빠른 사람이다. 세상이 성현의 말씀과 다른 이치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아침' 망국에 이르는 병

하나 세상을 성현의 말씀처럼 고쳐보자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 부자(夫子:공자)와 정암 조광조가 실재했던 전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서 비판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날카로운 어조로 권귀(權貴)를 비판한다. 지금의 권귀가 앞으로도 장구하게 조정을 위락과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권귀가 하는 일을 옳은 어조로 조목조목 비판하되, 던지시 빠져나갈 구멍까지 일러준다. 당연히 인격적인 비판은 하지 않는다. 권귀는 그 사람

의 비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안다. 불려 한 자리를 떴어 주면, 몇 번 고사하는 척 하다가 집집 근엄한 표정으로 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대고 그 자리에 나아간다. 지금 권귀의 권세가 장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마치 원수를 대하듯 매서운 비판을 퍼붓는다. 실정(失政)은 물론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마구 비난한다. 물론 백성을 위해서, 조정을 맑게 하기 위해서 등의 구체성이 극히 떨어지는, 그렇지만 듣기에는 무척 좋은 소리도 잊지 않았기는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던 입을 굳게 다물고, 권귀가 내뱉은 말의 속내를 헤아리는 데 나날을 다 보낸다. 오로지 권귀의 생각을 쫓기에 급급할 뿐이다. 아침꾼이 언관(사헌부와 사간원)이 되면, 올곧은 언론은커녕 권귀의 뜻을 받들어 반대 당파를 공격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바쁘고, 천관(이조)을 맡으면 반대 당파를 배제하고 자기 당파만 심는 인사를 하고, 지관(호조)을 손에 넣으면 백성의 궁핍한 살림살이를 보살필 생각이 하지 않고, 오로지 권귀와 당파의 재산을 불릴 방도만 궁리한다. 요컨대 아침꾼은 사직과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권귀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하고, 권귀가 흡족해 할 만한 일만 골라서 할 뿐이다.

'논아침'을 읽고 나는 조선이 왜 망했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오유재집'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졌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오유재집'에는 저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 또 그 노인의 연락처도 적어 놓지 않았으니, 더더욱 알 길이 없게 됐다.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무고·투서 없는 상생사회로 가자

최근 비리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전남도청과 완도군청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인사비리와 부실공사 의혹으로 수개월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았던 김종식 완도군수가 새해를 맞아 내놓은 대군민 담화문이 눈길을 끈다. 김 군수는 5일 담화를 통해 "일부 정치인들이 군정 성과를 폄하하고 사정기만에 진정, 투서를 남발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었다"며 "이 같은 행동에는 깊은 자성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교훈 삼아 억측성 유언비어로 인한 소모적 논쟁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군수의 담화에는 수사의 골대를 벗은 출구분함보다 투서가 난무하는 현실에 대한 고뇌가 담겨져 있다. 전남도청의 인사비리 의혹을 담은 투서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으나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투서는 당초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의 이름으로 접수돼 뒷맛지못한 거짓 투서일 가능성

이 컸었다. 경찰이 2년 동안의 인사기록을 모두 뒤졌으나 투서자도 밝히지 못한 채 종결됐다.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동안 해당 자치단체가 겪었던 불명예와 수모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가장 큰 폐해로 등장한 것이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다. 여당의 그늘에서 경쟁자를 향해 쏘아대는 투서·무고는 바로 이런 사회현상을 반영한다. 비단 자치단체뿐만이, 지역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기업을 둘러싼 여건도 마찬가지다.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기업을 두고 부모살, 자급 압박설을 흘려 기업을 생멸시킬 조이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근거 없는 투서나 무고는 인격 살인자, 기업 말살과 다름없는 부도덕한 행위다. 지금부터라도 신뢰사회를 무너뜨리는 독약인 투서나 무고는 지역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김재희



"엄마, 저 오늘 교실에서 친구들한테 폭행 당했어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욕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는데 엄마 얼굴이 떠올라 그냥 내려왔어요." 광주외국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말이다. 이 피해 학생은 한 친구의 흉을 봤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피해학생은 바로 교사를 찾아갔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들에게 전학,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아이는 구토, 불면증, 두통, 대인기피

는 자녀가 학교에서 급급 갈취나 폭력을 당하게 되면 분노하면서도 불안감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장난으로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며 돈을 빼앗는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다. 장난으로 친구를 괴롭혔지만, 그 친구가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자살까지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의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법은 주위에 알리는 것이다. 내 가족 또는 친구, 선생님, 청소년폭력예방재단(062-521-1318)에 알려서 폭력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학교폭력 이제 숨기지 마세요

중 등 심각한 증상을 보이거나 심각한 악을 먹어야만 안정이 되고 잠을 자는 아이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몸과 마음은 점점 타들어갔다. '학교폭력 SOS위기 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업무 협약을 맺고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과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측의 중재신청을 받고 학교, 가해자, 피해자 측에 중재 상담을 했다. 합의 후, 피해학생은 약물치료와 함께 전문심리 상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학생들도 본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그럼 우리 부모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우리 아이가 선배에게 돈을 빼앗기고 폭력을 당했는데 선생님께 말하면 보복 폭행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부모 상담수

는 자신의 자녀가 폭력의 가해자가 된 경우 학부모 상담수는 당황하며 합의만을 서두른다. "우리 아이가 장난으로 때린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녀가 저지른 실수를 감싸 안으려고만 한다면 그 아이는 실수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 내 자녀의 실수를 바로 잡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면 빨리 대처해 평생 가슴에 아픈 상처로 남지 않도록 치료를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날을 기원하며 청소년들의 환히 웃는 모습을 떠올려 본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광주지부 상담실장>

정신병원 입원환자 24시간 핫라인 설치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보면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례가 적잖게 나온다. 또 정신병이 없는 사람조차도 재산이나 이권을 노린 사람들에 의해 원치 않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는 일도 발생한다. 정부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그동안 강제 입원시 보호자 한명이 동의하면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2명의 동의를 받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정작 1명을 2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2인 이상이 찢다면 그만이다. 그리고 오히려 2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퇴원할 수 있기 때문에 퇴원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신병이 있는 사람에게 선진국처럼 '공공 후견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재산이나 인권, 원한 등 이해 관계자인 가족 대신, 법원

과 같은 제3자를 지정해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뒤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객관적인 제3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역시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일단 강제 입원이 됐다 하면 퇴원은 매우 까다로운 구조도 문제이다. 환자가 6개월 이상 입원할 경우 정신보건심사위원회가 구성돼 퇴원 여부를 결정하지만 퇴원율은 100명 중 3~4명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입원한 환자들이 24시간 언제든지 외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전화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운영해 하고, 또한 그조차도 본인이 원하는 제3자 누구와도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준용·목포시 옥암동

기고

김성술



광주 문화 중심도시 건설의 핵심인 문화 전당 건설이 옛 도청 별관의 철거 문제로 지지부진 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누구도 원론적 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광주는 우리 민족의 큰 물결이 있을 때 마다 그 본분과 책무를 다하여 이순신 장군도 호남이 없다면 나라 없었다고 극찬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고난과 필박을 각오하고 필사 즉 생의 애국 애족정신과, 그 시대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시대정신과, 불의하고는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인 호

무리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왜냐면 5.18 정신은 한 건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보도를 보면 옛 도청 별관의 사수나 철거냐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5.18 정신을 왜곡되게 보일 수 있다고 본다. 5.18이 도청전당이 목적이 아닌 것처럼 일부 별관 보존만이 5.18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철거 할 별관을 보존 문화 시설 수 있는 기업을 동원하여 문화전당 안에 설치하여 감명 있게 전시 할 수 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처럼 생동감 있는 영상화 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 넷째 문화전당 주위의

문화전당에 5·18 꽃 피우자

남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시대정신을 발휘하여 문화전당에 5.18을 꽃 피우어야 할 때라고 본다. 사실 5.18은 어느 한곳에서만 일어 난 일도 아니고 몇 사람만 의 5.18도 아니다 전 지역 전 시민이 부당한 계엄령과 폭두각시 되어 가는 대 통령을 보지 못해 일어나 역사의 왜곡을 바로 잡는 민주주의 종소리였다. 이 정신이 진정한 5.18이요, 이 정신이 민주주의 뿌리가 되어 가고 있다. 옛 도청 별관의 역사성도 중요 하지만 또 하나의 정신,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5.18의 완성은 앞당겨질 것이다. 설계대로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5.18을 꽃피우는 일 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문화전당 설계에 이미 5.18 정신과 기상이 담은 있는 걸작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한 건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5.18을 왜곡 폄해 하는

상인과 통행하는 분들의 고통에도 귀 기울이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호남의 정신 즉 5.18의 정신이 요청되고 있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맡았이 협조하고 참는 고마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다섯째 어떤 건물도 세월이 가면 헛고 보기 흉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러나 정신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 뚜렷이 다가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에서 '너 자신을 알라'의 교훈이 좋은 예이다. 이번 5.18 단체의 파격적인 양보로 5.18 정신이 깃든 문화전당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이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리더 하는 참 호남정신이라고 본다. 5.18 정신을 더욱 승화하여 꽃피우는 날이 빨리 와 주었으면 한다. 설계대로 하는 것이 화이부동이요, 여시구진일 것 이다. <우정증 광주지점 보급소장>

졸업 스펙 경쟁, 시간·돈 낭비 부추긴다

동생이 작년도 8월에 대학을 졸업했다. 원래는 2월에 졸업했어야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수강하던 과목 하나를 취소했다. 동생이 졸업을 미룬 이유는 학점 평점을 0.08점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그전 학기까지 동생의 학점 평점은 3.82점(4.3점 만점)으로써 상당히 좋은 점수였다. 하지만 그 대학에서는 '최우등 졸업 기준'이라는 게 있었고 그 학점요건이 3.9점인 데 여기에 0.08점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동생은 이 '0.08점'을 위해 그는 6개월이라는 시간과 한 학기 등록금 150만원을 더 소비했다. 소위 학점세탁을 한 것이다. 동생의 경우 말고도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높이기 위해 수십 차례 이상 시험에 응시하는 시간과 경비를 엄청 까먹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대학생들이 이처럼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까지 학력이나 학점, 외국어 성적,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이유는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 문을 뚫기 위해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한다. 소위 졸업 스펙 경쟁이 너무 남비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토익 10점, 학점 0.1점에 연연해 반복해서 영어시험에 응시하거나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기를 연장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사회적 낭비를 부추킨다. 졸업을 미루면서까지 학점 세탁을 하고, 단지 입사지원서의 자기소개서에 튀는 이력을 한 줄이라도 더 써넣기 위해 이색 자격증 취득에 시간과 돈을 쓰는 이런 현상을 얼마 나 더 지켜야 할지가 답답하다. ▲안효령·광주시 북구 정동동

서민물가 줄줄이 인상, 서민가계 허리 한다

연초부터 공공요금에 이어 서민물가까지 들쭉이 있다. 지난해 3월 이명박(MB)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서민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이른바 'MB 생활품' 52개 품목 가운데 상당수 품목이 줄줄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제위기' 가운데 생활품 가격의 잇단 인상은 가족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5월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생활 출고가격 15% 인상을 시작으로 새해 들어 소주, 세제, 삼푸, 계란, 휘발유 등 MB 생활품들이 5~18% 올랐다. 불황의 시름을 달래주는 소주는 5~6%, 서민의 영양식품인 계란 값도 급등해 일반란(30개)의 경우 지난 2004년 1차 AI(조류인플루엔자) 파동 이후 최고치인 5천230원에 팔리고 있다. 휘발유 소매가격도 8 당 평균 1천300원선을 다시 넘어섰고 삼푸, 린스, 세탁제 등 주요 생활용품 가격은 7~10%

인상했다. MB 물가의 급등은 정부의 서민물가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의미한다. 물론 지난해 환율 급등으로 원가부담이 커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생활품 가격을 줄줄이, 그것도 연초에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지금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러하면 무엇보다 MB 물가를 지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소득이 줄어 가족이나 어렵다. 이런 관에 물가까지 오르면 서민경제는 파탄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서민 가계가 무너지면 경제회생도, 사회안정도 물거품이 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물가 관리 등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업계도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물가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최근 '국회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은 착잡하다.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 상정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최후의 물리적 수단인 경호권이 발동되는 지를 지켜보고 있다. 국회의장 경호권은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의정사에서 경호권이 발동될 때마다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함부로 쓸 수 없는 '양날의 칼'이다. 최초 경호권을 발동한 이는 1958년 4대 국회의 한희석 의장. 그는 같은 해 8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거부당한 김상돈 의원 등에게 경호권을 발동 퇴장시켰다. 같은 해 12월24일에는 신국가보안법 처리를 위해 야당 의원들을 끌어나 5시간 동안 감금시켰다. 세 번째 경호권은 1960년 11월23일, 5대 정기국회에서 광상훈 의장이 발동했다. 3·15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꼽힌

장경근 피고의 해외도주 사건에 대한 진상추궁 과정에서 벗어났다. 이후 경호권은 1979년 10월4일 백두진 의장에 의해 다시 발동돼 여당이었던 공화당이 김영삼 의원 제명결의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이는 10·26사태를 촉발시켰고 마침내 박정희 철권 통치 18년을 종식 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1986년 10월16일 최영철 당시 부의장은 국회 본회의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시론' 논란을 불러온 통일민주당 유성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경호권을 발동, 가결시켰다. 이 또한 6·10 투쟁을 불러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졌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과정에서 발동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단계 아래인 '질서유지권'으로 기록돼 있다. 이처럼 국회의장의 경호권은 정치적 파국이나 큰 혼란을 잉태한다. 따라서 삼부권 경호권 발동은 정치인은 물론 국민에게 큰 불행임에 틀림없다.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



Table with Kwangju Daily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